"전북 정치권의 힘 부족 실감"

민주 김윤덕 의원, 전주~김천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 관련
"사전타당성 대상 반영돼 무산된건 아냐… 더 노력 기울여 총력 대응을"

국회 국토위 소속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현안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죽기살기로 했는데 안됐다. 전북도민께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언급하고 "전북 정치권의 힘 부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며 아쉬워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경우 이번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확신했는데 안됐다"고 더욱 아쉬움을 나타내며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제4차 국도철도망 계획과 관련해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빠진 것은 전북 정치권이 힘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반영돼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닌 만큼, 전북 정치권이 더 노력을 기울여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윤덕 의원은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경제성 위주로만 되다 보니 인구가 180만인 전북은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고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며 "예타제도 개선 같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모두 6개 사업을 건의했다.

하지만,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전주-김천 철도는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됐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일 고창 노을대교 건립 노선 현장을 찾아 노을대교 건립 특별위원, 주민, 당 지역위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창 발전 선도 명품교량 만들 것"

민주 윤준병 의원, 노을대교 건립 노선 현장 방문
당 지역위 · 대교 건립 특위 위원 · 주민들과 다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4일 정읍·고창지역위원회 및 노을대교 건립 특별 위원회 위원, 주민 등 40여명과 함께 노을대교 주교각이 세워질 심원면 만돌리에 위치한 대축도를 방문해 노을대교 건립 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노을대교를 고창 발전을 선도하는 명품교량으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적 갯벌 생태계의 훼손 등 환경훼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주요 거점 장소인 대축도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4만여평의 넓은 대축도 내에 주교각을 설치해 갯벌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부터 친환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현재 노을대교 건설 사업은 7월 중 열리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재정사업평가(AHP 평가)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윤준병 의원 및 노을대교 추진 위원, 전북도 등 유관기관과 주민들의 노력과 성원이 있었던 만큼, 노을대교 건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도 77호선 마지막 단절 구간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 사업은 그간 전북도와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정치권에 예산 반영과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며 17년째 표류 돼왔으며,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한 사업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관 기관과 수시로 협업해 왔으며, 고창과 부안 변산반도를 잇는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 왔다.

윤 의원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경험을 통한 사업계획의 개선·변경에 앞장섰다.

사업범위를 노을대교 건설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량으로 한정해 비용을 최소화(당초 4,276억 → 변경 3,656억)했고, 노을대교 건설과 연계돼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재산정해 반영 가능한 효과를 최대한 추가, 경제성(B/C)을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직접 세종을 오가며 노을대교 건설의 당위성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을 만나 노을대교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과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무려 17년간이나 숙성시켜왔던 노을대교 건설은 그 숙성기간에 어울리도록 그 품격에 맞게 명품교량으로 탄생 시켜야한다"며 "기획재정부 심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을대교 건설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이 유력한 만큼 올해 하반기에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설계 방향 설정 등도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며 "17년의 기다림을 마무리하고, 노을대교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명품교량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고창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 전 대표, 대권 출사표

"지금은 불안의 시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그 일을 제가 할 것"

신복지 · 중산층 경제
헌법 개정 ·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 등 5대 비전 제시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온라인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공개한 출마선언 영상을 통해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라며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5대 비전으로 ▲신복지 ▲중산층 경제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을 제시했다.

신복지와 관련, 그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겠다.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 "서울 시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산다.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산층 비중을 70%(현재 57%)로 늘리고, 이를 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IT·바이오·미래차·AI 등 첨단기술 분야 육성 ▲그린 산업 활성화 ▲돌봄 등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정치가 내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화두도 던졌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에 나오는 행복추구, 균형발전, 국민 주권, 기회균등, 평등이 창백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 계승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일본·러시아와 협력 개척 ▲세계 모든 나라와 호혜적 협력 확대 등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문화강국' 비전과 관련해서는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 문화예술 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고,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끝으로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며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 영상 공개 후 경선 캠프인 '꿀연 캠프' 발대식을 갖고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출마선언 자리에는 정세균 전 총리가 참석했다.

캠프 총괄은 5선의 설훈 의원이 맡았다. 총괄본부장은 박광온 의원, 상황본부장은 최인호 의원, 정책본부장은 홍익표 의원이다.

이 전 대표 정무실장은 윤영찬 의원, 비서실장은 이훈 전 의원, 수행실장은 오영환 의원이 각각 담당한다. 수석대변인은 오영훈 의원, 대변인은 배재정 전 의원이 맡았다.

/뉴시스

윤준병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윤준병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 등 기후환경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후 총선공약의 실천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0건에 이르는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심의 및 확보에 노력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유호상 기자

민주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손실보상 법안' 본회의 통과

법사위 심사 기간 50일로 단축… 상원 기능 폐지

민주 한병도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사위 역할 재정립 발목잡기식 구태정치 청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되며,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손실보상 법안의 통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돼 이제야 한숨이 놓인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익산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자치 발전 유공 표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JTV전주방송 이승환 기자,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백영채 관리과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운영지원 및 지방자치 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송지용 의장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책제안과 비판으로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JTV전주방송 이승환 기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 군산지역위, 다문화가족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 의원) 다문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는 지난 3일 다문화이주여성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 다문화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다문화이주여성연합협의회가 주관하며 군산시, 호원대학교 다문화종합지원센터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로 나선 김은영 김제시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팀장이 이주여성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중국(조연옥 대표), 필리핀(정수빈 대표), 태국(한성주 대표), 몽골(이지원 대표), 캄보디아(김민정 대표), 베트남(박혜나 대표)등 7개국 이주여성연합협의회에서 각 국가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토론회에 참여한 조연옥 중국이주여성협의회 대표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려면, 한국다문화이주여성연합회가 직접 참여해 만들고, 우리 상황을 잘 알고있는 다문화 연합체가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문재인정부도 다문화가족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고용허가제와 다문화정책기본계획 등을 뒷받침해 군산을 넘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